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조례상의 “근로”를 “노동”으로 하는
일괄정비조례
(권수정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수 정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조례상의 “근로”를 “노동”으로 하는 일괄정비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일제잔재 청산대상이기도 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입니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

로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 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역시 올바른 ‘노동’ 명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제도차원에서의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의 완성과 함께 국가 전반의 노동존중 기반마련에 서울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